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 위원회

건강연대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140-5호 3층 / 전화 711-0835 / 전송 711-0834 / 홈페이지 www.konkang.or.kr / E-mail kkvd99@hitel.net

날 짜 : 2001년 4월 19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복지 담당기자

제 목 :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와 수가인하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캠페인 시작

1.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01년 4월 19일 (목) 오전 11시 종로 YMCA앞에서 거리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수가 재조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향후 공대위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2. 그동안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수가인상의 부당함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대위는 지역의 노동, 시민단체들과 함께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함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운동, 허위청구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 요구 및 형사처벌 촉구, 진료비 세부내역서 정보공개운동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운동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3. 또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재 의료법에 명기되어 있는 처방전 2장 발행원칙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처방전을 1장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률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게을리하고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이 아니기에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건복지부가 계속해서 소홀히 할 경우 법적 대응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4. 캠페인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신종원 서울YMCA 부장이 사회를, 민주노동 허영구 부위원장이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고, 전농의 정광훈 의장이 요구사항 및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서명운동 캠페인을 위해 건강보험개혁과 재정안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허위부당청구, 무리한 수가인상, 고가약 처방 등의 영정을 세워 건강보험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문>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수가 재조정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질되고 신임 김원길 장관이 임명되었지만, 김원길 장관은 재정위기에 대한 종합대책 발표를 5월로 연기해놓고 재정파탄의 원인 진단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나 아직 올해 재정적자의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만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5월 이후로 미루고 있어 마치 깜짝쇼를 준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또한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주도적인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는 노동, 농민, 시민단체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에 별반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알다시피, 그동안 노동, 농민,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은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달래기 위해 일방적 퍼주기식 수가인상에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 농민, 시민단체의 수가인상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조차 무시한채 의료계 무마용으로 1999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약 44%의 수가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의약분업의 골격조차 심히 훼손하는 파행을 거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올해 4조 내지 6조가량의 재정적자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외래 총 진료비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001년 1월에는 61.7% 증가하여, 의원의 진료비 수입이 1월~3월 평균 940만원 가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주요한 원인이 수가인상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가인하 조치가 필요함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 농민, 시민단체들은 1)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인 부당한 수가인상에 대한 재조정과 2)정책실패의 책임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의 대폭적 확대 3) 보험 적용 확대 등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보험료인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대신할 새로운 수가제도 도입, 일차 의료 강화방안과 의료기관 종별 차등수가제의 도입, 공공의료의 강화와 건강보험 적용 수준의 획기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허위. 부당청구 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정부는 보험료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없애겠다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을 뿐, 한편으로는 의약계에 자율징계권을 넘겨주는 일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 행위를 실제로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허위.부당청구를 자행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이름을 즉각 공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약계는 허위.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국민앞에 반성하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의료계는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일부 의사들의 행위이라고 주장하면서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의료계는 명백한 범법행위인 허위.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의료계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노동·농민·시민단체는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수가재조정을 위한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뜻을 확인할 것이며, 정부가 계속 무책임한 대책으로 일관하며 국민부담을 확대할 경우 보험료 납부거부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반대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1. 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인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를 즉각 재조정하라!
1.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즉각 공개하고 형사처벌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라.
1.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지원을 실시하라.
1. 처방전 2장 발행, 진료비 내역서, 약제비 내역서 발행하여 보험가입자의 주권을 확대하라.
1. 보험적용 확대, 행위별 수가제 폐지, 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2001년 4월 19일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1세기생협연대

건강보험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계획

1. 전국 서명운동과 시민여론 확산 계획

- 광주,울산,대전,부산,대구등 지역대책위와 각 단체별로 전국적인 서명운동 전개
- 보건복지부 및 국회에 "수가인하를 위한 시민의 요구"로 제출
- 거리 서명운동과 집회를 통한 시민 여론 확산
- 4/23-25일 보험료인상반대 1인 거리시위 예정
- 4/26일 보험료 인상 반대와 수가 재조정 요구 범국민결의대회 예정

2. 건강보험 재정 지키기,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시민행동 전개

-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운동
-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명단 정보공개 운동
-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 촉구(미비시 시민고발단 조직)
- 진료비 세부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운동, 부당이득 환수 운동

3. 의약분업 정착 및 환자 권리 찾기 운동 전개

1) 처방전 1장 발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촉구 및 의협에 협조 요청

- 처방전 2장 받기 캠페인

2) 주사제 처방율, 고가약 처방율 높은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운동

- 주사제 처방 현황 조사 및 발표
- 주사제 처방율 TOP 의료기관 발표 등

3) 처방전 모으기 및 걱정 처방 내용 발표 추진

- 시민들로부터 처방전을 모아서 분석, 발표
-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걱정처방 정보 공개

4)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발급하도록 운동

- 진료비, 조제료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요구하기
- 진료비, 조제료 세부 내역서와 영수증 발급하도록 의협에 협조 요청

건강보험 재정파탄,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구실로 보험료를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한 정부가 무려 5차례의 부당하고도 과도한 수가인상을 해주면서 발생한 재정의 위기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부당하게 수가를 인상하면서도 MRI, 예방접종 등에 대한 급여확대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이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처사를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는 부당한 수가인상 때문입니다.

때를 기다리던 것처럼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이 마치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 재정위기는 정부의 무원칙하고 부당한 수가인상에 초래된 것이며, 의약분업, 의보통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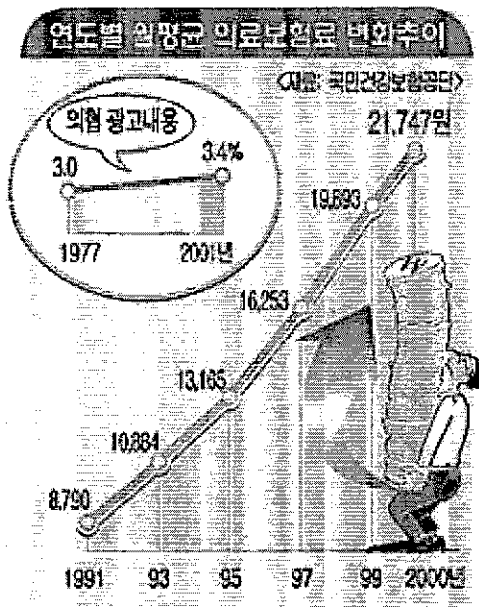
수가 인상 시기	수가 인상율	재정 부담 증가액
1999년 11월 15일	9.0%	3,956억 원
2000년 4월 1일	6.0%	2,246억 원
2000년 7월 1일	9.2%	9,262억 원
2000년 9월 1일	6.5%	4,257억 원
2001년 1월 1일	7.08%	4,700억 원
계	43.9%(복리)	24,421억 원

· 최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요약

의약분업은 약물오남용을 줄이고 국민 모두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제도입니다.

의료보험통합 역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보험혜택 확대없는 보험료 인상은 반대 합니다.



국민 여러분!

IMF 체제이후 대다수의 노동자, 농민들의 실질임금은 감소되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실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도 15-20%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밀빠진 독에 물붓기식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과 보험 혜택 확대 없는 보험료 인상을 반대합니다.

- 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인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를 즉각 재조정하라!
-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즉각 공개하고 처벌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라.
- 지역의보 제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을 실시하라.
- 처방전 2장 발행, 진료비 내역서, 약제비 내역서 발행하여 보험가입자의 주권을 확대하라.
- 보험급여 확대, 행위별 수가제 폐지, 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침묵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1세기생협연대